

정읍시, 모든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5만3천여세대 11만666명에 총 111억원 지급

다음달 6일부터 신청...14일부터 5부제로 발급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진섭 시장과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은 28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읍시의회는 전날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정읍시 재난소득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29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5만3765세대 11만666명이 해당되며 약 111억원(전액 시비)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속한 소비 활동을 위해 정읍시 상품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

급하며 선불카드를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월31일까지 지역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6월 5일 까지 1주일간이며 발급은 5월14일부터 5부제(주민등록번호 기준)로 배부할 예정이다.

아동이나 거동이 어려운 고령노인은 가족관계만 확인되면 발급해 줄 계획이다.

유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활동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높은 점수를 받고 있

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기초 수급자에 대해 1인 가구 기준 52만원을 지급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1인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8961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4개월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또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해 16억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개인별 4만원씩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에 대해 생활지원비도 지원한다.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1개월분 생활지원비가 1회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인 45만4900원부터 5인 최대 145만7500원까지 지급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2억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장별로 60만원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194개소에 총 12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시는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접수자 301명에 대해 총 4억 8400만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정읍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해 시

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낙삼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상권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코로나19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나서 사회전과 차단과 방역 활동에 매진해준 덕분"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두달여만에 되찾은 활기”...삼척가축시장 재개장

시장 관계자 “삼척·동해·태백 지역 농가만 참여”



삼척가축시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딛고 두 달 만에 재개장해 활기를 찾았다.

지난 2월 11일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된 강원 삼척가축시장이 28일 오전 약 두 달 만에 재개장했다.

재개장 첫날인 이날은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경매를 삼척·동해·태백 지역으로 한정해 진행했다. 한우도 기준 200여두 이상에서 15두도 축소됐다.

가축시장 모든 방문객들은 입구에서부터 차량 소독, 손소독제, 방호복 착용 등 강도 높은 방역을 거쳐 입장할 수 있었다.

오전 10시 경매가 시작되자 2번

의 유찰 끝에 3번 소가 341만원에 첫 낙찰됐다.

하지만 평소 경매와는 달리 지역을 한정하다보니 외부에서 소를 구입하려는 방문객이 없어 가격이 2~3차례 낮게 재경매에 들어가도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삼척 미로면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는 “평소에는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외지에서 방문하는 장사꾼들도 많아 좋은 가격에 잘 팔려나간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삼척가축시장 관계자는 “오늘은 삼척·동해·태백 지역으로 한정해 경매를 진행하다보니 유찰이 좀 발생했다”며 “어린이날 이후로는 소 가격도 정상궤도에 올라 지급보다 더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이슬 기자

임실군, 농민공익수당 6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전북 임실군은 올해부터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현재까지 사업 신청한 557개 농가에 대한 지급대상자 요건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는 9월까지 연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접수 마감 하루를 앞두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

에 대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전북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가로 도내에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구비서류를 갖춰 마을 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을 이장은 마을경작사업위원회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유·무형적으로 높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급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고창군산림조합, 원목 소나무 효도이자 100개 기증

전북 고창군산림조합이 28일 오전 고창군청을 방문해 별채 사업으로 버려지는 소나무를 활용해 제작한 원목 효도이자 100개를 고창군에 기증했다.

고창산림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개씩 원목 의자를 기증

하고 있다. 기증받은 의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제작돼 마을 안길이나 쉼터, 버스 정류장 등에 설치돼 어르신들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건 산림조합장은 “별채목을

이용해 만든 원목 의자가 주민들께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계절 변하지 않는 푸르른 소나무처럼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고창군산림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서천군, 6월 한산 모시문화제 취소

충남 서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제31회 한산 모시문화제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감염예방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모시문화제를 취소했다.

군은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저산밭을 갈쌈놀이와 미니베를 모시짜기의 행사 진행을 위해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연습을 위해 자주 모일 수밖에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한산 모시문화제 취소에 따라 한산모시옷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모시옷 입기 캠페인, 모시제품 20%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축제 예산 1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편성할 예정이다.



날이 좋아서 첫 모내기시작

지난 28일 오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김기현씨의 논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이뤄졌다.

용인 죽전1동,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과 서용인새마을금고가 28일 신생아에게 출생 축하금 10만원을 지원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자치단체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기관인동이 지

역 내 금융기관과 협력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드는 사업을 펴는 것이라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선착순 200명에게 지원하는데 MG희망나눔재단과 서용인새마을금고가 5만원씩 부담한다.

제주 대정읍 해상에 풍력발전기 설치되나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서식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을 풍력발전기 설치로 지정하는 동의안이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반대 속에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계위원회는 28일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에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대정읍 동일리 해역 약 5.46km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700억원을 들여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 해저·지중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예정자는 한국남부발전(49.9%)과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전주이다.

도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한 것은 2012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11대 도의회에서도 순탄치는 않았다.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9월 심사보류, 올해 3월 의결보류에 이어 3번째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대정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는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



다 생태계를 교란 시킬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해상풍력발전이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 서식처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 서부는 탐라해상풍력이 거동 중이고 올해 안에 한림해상풍력도 예정돼 있어 발전단지가 서부 연안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대정해상풍력까지 결정되면 돌고래들이 갈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 열대 및 온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에 주로 분포한다. 불법포획된 후 돌고래쇼에 이용되다 2013년 제주 바다로 방류된 ‘제돌이’가 널리 알려져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제주도 연안에 걸쳐 18차례 조사한 결과 대정읍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확인했다.

강이라 기자